

“집에만 있어라”... 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작년 3월 22일 구속 후 349일만에... 법원 “재판부 새로 구성 심리기간 부족”

보증금 10억 납입·주거지 자택 제한 등 내걸어... 병보석 요청은 기각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지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의 재판부에게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 기간인 4월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측근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

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점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는 주소지로만 제한하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도 제한한다”며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사유와 진료를 병을 기재해 법원 허가를 받고 진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보석금의 수령이나 석방 등 집

행 절차는 검찰이 지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후에는 법원, 검찰, 관할경찰서장 등 이중삼중의 엄격한 감시와 감독을 받게 된다”며 “특히 법원에서 주심 판사 주재로 정기적으로 검찰, 변호사, 관할 경찰서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구

속영장을 발부한 박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뉴스

공정위, 한유총 현장조사 돌입 김상조 “배신 문자가 결정적”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 앞서 공개됐던 이른바 ‘배신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한유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뉴스

문 대통령 “제2벤처붐 일으킬 것... 혁신성 발휘 환경 조성”

“벤처, 경제성장 좌우 국가경쟁력 핵심 요인 내년 성장 발판 마련 유니콘 기업 20개 늘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 창업·벤처기업이 집결해 있는 ‘디캠프(D·Camp)’를 찾아 “이제 우리 정부는 창업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이번 행사는 지난달 7일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원)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데 후속조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로 국정과정으로 삼고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새해 들어 벤처기업인과 만남이 오늘로 다섯 번째”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은 벤처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이번 보고회 취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융합과 속도, 혁신과 도전정신이 중요하다”며 “벤처기업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벤처·창업 역량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기업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애플과 아마존 등을 거론, “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앞서 입주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미 세계 각국은 혁신 창업 경쟁이 치열하다”며 “우리 벤처기업들은 아직 국내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1997년에서 2000년대 사이, 최단기간에 벤처 강국으로 도약했던 경험에 있다”며 “당시 벤처투자가 2조원을 넘고, 벤처기업수도 1만개를 돌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이들은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에 취업하길 원할 정도였다”며 “그때의 벤처붐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며 “출범 직후부터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14번에 걸쳐 정책을 발전시켜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형 전문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 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벤처기업을 키우고 투자액을 획수하는데 M&A(인수·합병) 시장의 확대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M&A를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가 돈을 벌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혁신성을 발휘하여 보란 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어 나가는 국민성이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우리 국민이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업이 얼마든지 혁신을 실행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드리는 것은 정부는 동반자, 후원자가 되어 여러분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앞장서서 더 많은 청년, 혁신가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

재직 중 성범죄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민주 이춘석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성범죄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김도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들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1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할 경

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수뢰죄·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수뢰 및 횡령·배임 등의 사유 외에 성범죄가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새롭게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는 빠져 있어 입법비거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등 직장 내 특수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부터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물론, 우리 사회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여야, 미세먼지 관련법 13일 본회의 처리

국회 계류 법안 100여건

미세먼지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협력,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법안을 1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검토한 법안은 그 어느 때보다 내밀하게 검토할 법안이 있지만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 미쟁점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7일 만나 미세먼지 관련 계류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려낼 예정이다. 국회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계류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

품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한편, 수도권에 6일 연세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정치권이 뒤늦게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에 나섰다. 최장 4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안들이 이 제사야 ‘미세먼지’를 털어내고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새누리당 안전관리사업법 ▲실내 공기질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 미쟁점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7일 만나 미세먼지 관련 계류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려낼 예정이다.

국회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법안은 100여건에 달한다. /뉴스

문 대통령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추진... 필요시 추경 긴급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적극 검토” 지시

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경기(면적)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이 함께 미세먼

지 예보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며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은 전날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 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노 실장의 지시로 이날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직원들의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체 대책의 시행에 들어갔다.

노 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개인 차량 전면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

령 기간동안 보유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중국과의 공동 인공강우 방안의 실효성 지적에 “그래서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검토) 지시 사항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등 한중 공동사업과 관련한 비용분담 계획에 대해선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폭 넓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파악 등 대책 마련 상황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관련 내용은 계속 회의를 해왔다”며 “어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긴급보고를 했고, 어제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뉴스